

2020년 군무원 행정학 (2020.7.18.)

• 해설 : 이승철

※ 수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을 이렇게 허술하게 출제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복수정답이 가능한 문제 있음).

01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왈도(D. Waldo)가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② 윌슨(W. Wilson)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 ③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가설의 경험적 검증등을 강조했다.
- ④ 현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수 없으므로 행정학은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 ① (X) 왈도(D. Waldo)가 'art' 또는 'professional'로 지칭하는 기술성은 행정활동 자체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함
사이먼(H. Simon)이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하는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함.
- ② (△) 행정관리론·원리접근법은 과학성으로 보는 견해, 기술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새행정학(5전정판)에서는 ②번 지문을 그대로 서술하여 기술성으로 봄(당시 행정의 비능률을 극복하는 처방적 측면으로 해석).

* 새행정학(이종수 외 공저 제5전정판) 원문 내용을 수록한다(이후 판인 새행정학 2.0에서는 삭제됨).

왈도가 'art' 또는 professional'이란 용어로 지칭하는 기술성은 행정의 활동 자체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이먼이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하는 기술성이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취하는가의 방법을 의미한다. 백완기(1987: 75)는 행정학에서 기술성을 어떻게(how)를 중심으로 실용성·실천성·처방성·명령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자들이 기술성을 어떻게 정의내리든, 기술이란 개념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통한 인간 복지의 증진에 유용한 실질적인 지식이다.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래 미국의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를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행정학의 기술성이 자연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의 과학적 연구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따지고 보면 행정의 과학성이 아니라 윌슨은 정치로부터 행정의 본리를 주장하면서 '과학적'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어위(L. H. Urwick)은 행정의 여러가지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나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전후 사이먼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바 있다. 어쨌든 이들이 행정의 능률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관리기법이나 원리들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 행정의 기술성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다.

행정학의 과학성 문제는 인간 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던 행태주의 연구 경향에 의해 주요하게 제기된 것이다. 행태주의자들은 제도나 구조보다 인간의 행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학·사회학·심리학·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학문적 연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했으며, 연구 방법에서 과학적 조사연구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이론이나 모형을 구성할 때 논리적 치밀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가설의 경험적 검증, 자료의 수량적 처리 등을 강조했다. 따라서 행태주의 연구 경향에 따르는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사이먼(H. A. Simon)과 랜다우(M. Landau)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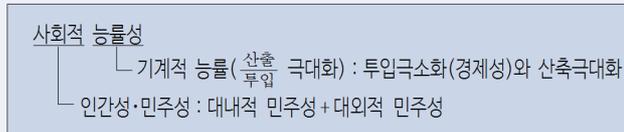
답 ①

02 디мок(M. Dimock)의 사회적 능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 ②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 ③ 경제성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이다.
- ④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

해설

사회적 능률성과 가장 관련된 것은 ②이다. 그런데 사회적 능률성은 능률성의 기본 개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③④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적 능률이 인간성·민주성과는 관련되어도 분배의 형평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① 사회적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 새행정학 책 관련 내용을 추가함

사회적 효율성은 디мок(Dimock, 1936)이 강조한 가치 개념이다. 이는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고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및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관이다. 따라서 사회적 효율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회적 효율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는 파레토 최적 상태를 들 수 있다. 파레토 최적 상태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구의 후생도 증대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파레토 최적 상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답 ①

[관련기출1] 사회적 능률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2003 국가7급

① 사회적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능률 개념 ② 디мок(M. E. Dimock)이 주장
 ③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추구 ④ 행정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

답 ①

[관련기출2]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옳은 설명은 몇 개인가? 2012 국회8급

㉠ 사이먼(H. A. Simon)은 기계적 효율성을 대차대조표적 효율성이라고 하면서 성과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 사회적 효율성은 1960년대 말 신행정론에서 디мок(M. E. Dimock)이 도입한 가치개념이다.
 ㉢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 효율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는 파레토 최적 상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출제자는 능률성(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을 효율성으로 표현하였다.
 ㉠ (○) 기계적 효율성은 산출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식, 단기적, 금전적, 수단적 효율성이다.
 ㉡ (x) 사회적 효율성은 산출의 가치를 고려하는 장기적, 인간적, 민주적, 상대적 효율성으로서 1930년대 통치기능설의 Dimock이 도입한 개념이다.
 ㉢ (x) 효과성에 대한 설명.
 ㉣ (x) 합리성에 대한 설명.
 ㉤ (○) 파레토최적기준은 능률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파레토최적은 최적의 자원배분(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만큼의 최적 소비·공급)을 의미할 뿐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하지는 못하므로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기준은 아니다.

답 ②

03 리비트(H. Leavitt)가 제시하는 조직 혁신의 주요 대상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
 ② 인간
 ③ 구조
 ④ 규범

해설

조직혁신 대상으로 리비트(H. Leavitt)는 과업(task), 구조(structure), 기술(technology), 인간(people)이라는 네 가지 변수를 제시.
 *출제자가 학자 이름 철자를 잘못 표기해서 제가 고침. 레비트(H. Levitt)로 출제됨. 보통은 리비트로 표기, 철자도 H. Leavitt.

답 ④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
 ②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③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④ 특별자치도

해설

•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생략)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답 ②

[관련기출]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혹은 행정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① 자치구 ② 제주특별자치도 ③ 인구 50만 이상의 시 ④ 서울특별시 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답 ⑤

05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학문적 계기로 옳은 것은?

- ① 신행정론의 시작
- ② 발전행정론의 대두
- ③ 뉴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 ④ 공공선택론의 태동

해설

행정학에서 가치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신행정론 등장 이후이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미국사회의 혼란에 대해 기존 행정학(행태주의)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합성과 실천성(action)을 갖는 처방적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치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답 ①

06 사이먼(H. A. Simon)의 정책결정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H. A. Simon)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행정인은 만족하는 선에서 그친다.
- ③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행정인은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
- ④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해설

③ (×) H. Simon의 만족모형에서 만족이란 심리적 성향에 의해 규정되는 주관적 합리성에 의해 의사결정이다. 행정인은 인지능력의 한계라는 제약이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사유의 과정이나 심사숙고를 통한 결정을 한다(실질적 합리성·주관적 합리성). 직관, 영감 등 초합리성에 기초한 결정은 Y. Dror의 최적모형에서 제시되었다.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의 비교

구 분	합리모형(이상적·규범적·연역적 모형)	만족모형(현실적·실증적·귀납적 모형)
정책결정자	경제인 - 전지전능(全知全能) 포괄적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완전 정보)	행정인 - 현실적 인간(인지능력의 한계) 제한된 합리성(불완전 정보)
합리성	객관적 합리성	주관적 합리성
대안탐색	모든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몇 개의 대안(만족대안을 찾을 때까지 순차적·무작위적 탐색)
결과예측	복잡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과를 예측(총체적 예측)	불확실한 상황을 단순화,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 예측(부분적 예측)
대안선택	최적(optimum) 대안 - 최적화 기준, 전체최적화	만족할 만한(satisficing) 대안 - 만족화 기준, 부분최적화

답 ③

07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성의 침해
- ② 서비스 품질의 저하
- ③ 경쟁의 심화
- ④ 행정책임 확보의 곤란성

해설

- ① 수익성에 치중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공익성 무시.
- ②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2가지 견해가 가능
 - ㉠ 서비스 품질 향상 : 경쟁체제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 때문에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됨.
 - ㉡ 서비스 품질 저하 : contracting-out 방식의 경우 민간업체는 공공성보다 비용 절감에 관심을 두므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정부로부터 받은 비용으로 제한된 서비스만 공급).
- ③ 문제점이 아니라 민영화의 목적 또는 장점. 정부에 의한 독점 방식에서 벗어나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시장의 자율성,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장점이 있다.
- ④ 정부 부문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책임회피 수단화, 공공의 관심사가 민간부문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사적 이익화. 정부와 민간공급자 간 책임 전가 등 초래

* 정답 여부 : ②는 양면적 해석 가능. ③은 문제점으로 보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

답 ③

[관련기출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2015 국가9급

-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 ③ 경쟁의 촉진
- ④ 작은 정부의 실현

해설

답 ②

[관련기출2]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7급

- ①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 정경유착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가 사적 서비스로 변환되기 때문에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③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지분이 다수 국민에게 지나치게 분산되면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 ④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은 민영화하게 되면 지나친 경쟁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없다.

해설

답 ④

08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이라 한다.
- ② 지방재정에는 지방세지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 ③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 ④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가에 보고한다.

해설

- **조세지출** : 각종 사회적·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세제상의 혜택(조세감면·비과세 등)을 통해 특정 활동이나 특정 집단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정부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으로 통상적 예산에 나타나는 직접지출(direct expenditure)과 대비되는 개념.
- **조세지출예산** :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던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도.
 - ① **중앙정부(국가)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142조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함(국가재정법 34조).
 -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지방세특례제한법 5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조세지출보고서를 첨부해야 함(지방재정법 시행령 49조2).

* ④번 '국가에 보고한다'는 오자로 보임. '국회에 보고한다.' 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라고 해야 함.

답 ②

09 에치오니(A. Etzioni)의 조직목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 목표
- ② 문화적 목표
- ③ 경제적 목표
- ④ 사회적 목표

해설

■ 상하통제와 복종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 조직유형(Etzioni)

구분	권력	조직 구성원의 관여 형태	특징	사례
강제적 조직	강제적 권력 물리적 힘이나 강제에 의한 복종	소외적 관여 조직목적·규범에 반대, 비자발적임	질서목표	교도소, 전시의 군대, 보호감호적 정신병원
공리적 조직 (功利的 組織)	보상적 권력 물질적·경제적 보상에 의한 복종	타산적 관여(보수적 관여)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참여	경제목표	이익집단, 회사, 평시의 군대(지원병제)
규범적 조직	규범적 권력 도덕적 감화에 따른 자발적 복종	도덕적 관여 적극적·자발적 참여, 사명감 지님	문화목표	종교집단, 이념정당, 학교, 치료적 목적의 정신병원

답 ④

10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테일러(F. W. Taylor)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에 두고,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한다.
- ② 어림식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의 기본 요소발견과 수행방법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킨다.
- ③ 과업은 일류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 높은 보상, 실패하는 경우 손실을 받게 된다.

해설

- ① (×)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경제적 효율성, 특히 노동생산성에 두었다(관리자·노동자간 협조(cooperation)를 과학적 관리의 핵심으로 보았다는 견해도 있음). 과학적 관리법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작업을 과업단위로 분류하여, 동시에 해당 과업을 수행할 적합한 작업자를 체계적으로 선발을 한 뒤 이러한 각각의 과업을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시도한다. 연구를 통한 개선점이 도출 될 경우 이를 노동자들에게 작업수행의 표준화, 지침으로 교육을 하여, 이러한 과업수행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노동자가 목표량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높은 보상)를 지급한다

기업관리의 4대원리	과업관리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작업과학·관리원칙의 발견 • 노동자의 과학적 선발, 교육 • 관리자·노동자간 협조(cooperation)로 과학적 직무 실시 • 노사 균등한 직무·책임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여건의 표준화, 공구의 표준화 • 시간 및 동작연구(time & motion study)를 통한 일일 과업량 설정 • 과업량은 일류직공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일 것 • 과업 달성시 고임금 지급(차별성과급제) • 과업 달성 실패시 저임금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 부여

답 ①

11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 ②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자원 배분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조직구성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 한다.
- ④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하기 쉽다.

해설

③ (x)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문, 사업부문의 두 상관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상·하간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권력균형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답 ③

[관련기출1]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이 중시하지 않는 것은?

2007 부산9급

- ① 전문성 확보
- ② 지식관리의 활성화
- ③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 ④ 구성원의 자기계발 활성화

해설

답 ③

[관련기출2]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기능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이 자원배분권을 공유한다.
- ② 조직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 ③ 명령 및 보고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 ④ 이중구조를 통한 인적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한다.
- ⑤ 조직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기업에서 많이 채택한다.

해설

답 ②

12 파슨스(T. Parsons)의 조직유형 중 조직체제의 목표달성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생산조직
- ② 정치조직
- ③ 통합조직
- ④ 형상유지조직

해설

■ 파슨스(T. Parsons)의 AGIL

구 분	적응기능 (Adaptation)	목표달성기능 (Goal attainment)	통합기능 (Integration)	잠재적 형상유지기능 (Latent pattern maintenance)
내 용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	체제가 추구할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유무형의 가치를 창출)	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의 활동을 조정	체제의 기본적 유형을 유지하고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치, 신념, 규범을 만들고 보존하며 전수
조직유형	경제적 생산조직	정치적 조직	통합기능적 조직	체제유지적 조직
조직역할	사회가 소비하는 재화·용역을 생산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의 목표달성에 기여	갈등해결, 협동유도, 동기유발	교육·문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
예	기업, 은행 등	행정기관, 정당 등	정당, 법원, 경찰서, 정신병원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

답 ②

[관련기출] 파슨스(T. 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과 그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5 지방7급

	사회적 기능	조직유형	사례
①	적응(adaptation) 기능	교육조직	학교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기능	정치조직	행정기관
③	통합(integration) 기능	통합조직	종교단체
④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	경제조직	민간기업

답 ②

13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 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③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 ④ 한시임기제공무원

해설

- ①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원래 공무원이던 자를 전환한 경우이며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아님
- ②④ (×) 임기제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임기동안만 신분보장이 되며 정년이 보장되지 않음.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 의의 :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규채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3.12. 도입

㉡ 내용

- ㉠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며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됨. 5급 이하 직위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보수 및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만 복리후생적 수당과 1년 단위 승급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 주당 근무시간 : 15~35시간 범위에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함(총래 15~25시간이던 것을 2019.6. 개정).
- ㉢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음(전일제 전환은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총래 공무원연급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8.9. 법 개정으로 '상시 공무에 종사'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공무원연급법이 적용됨.

✎ 시간선택제 공무원 :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시간단위로 정함.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근무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	주당 근무시간은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답 ③

✎ 임기제 공무원

- ① 개념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특수경력직)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기존 계약직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직급 명칭이 없었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직이 불가능하여 임기동안에는 신분보장이 되고 일반직과 같은 직급 명칭을 쓸 수 있음.
- ② 배경 : 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여,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을 통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제도를 신설,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 ③ 종류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 개방형 직위와 소속책임운영기관장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휴직 공무원, ㉡ 30일 이상의 병가 공무원, ㉢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한 30일 이상의 특별휴가 공무원,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⑤ 근무기간 : 5년의 범위(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 6개월 범위)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 ⑥ 근무성적평정
 - ㉠ 임용권자는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함.
- ⑦ 징계 :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은 적용 안함.
- ⑧ 신분보장 : 임기제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정해진 임기 동안에는 일반 경력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신분이 보장됨.

14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 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산의 전용
- ② 예산의 이체
- ③ 예산의 이월
- ④ 예산의 이용

해설

정답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일반적인 교수님들의 책에서는 예산의 이체가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들어있지 않으며, 또한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은 예산의 이용·전용이다.(인터넷 지방정부 사이트 상에서 재정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이체까지 드는 경우는 있다)
- 일반적으로 예산 이체의 경우 다른 조직으로 사업이나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그 사업이나 기능에 할당된 예산도 이관되는 것으로 사용 목적 자체가 바뀌지 않고 사용 주체만 바뀌게 된다. 따라서 국회 심의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이체가 사업 자체의 폐지나 사업간 통폐합 등의 경우에 이뤄지는 경우 전용 또는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이용이 수반되는 경우 이용을 위해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국가재정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즉, 이용은 장·관·항 간 상호 용통으로 국회의결이 필요하며, 정부조직 개편 발생시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로 예산의 상호 이용이나 이체가 가능하다. 문제에서 제시된 데로 '정부조직 개편', '예산의 상호 이용',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7조 상 예산의 이용이다.
- 지방재정법의 경우 이용과 이체를 확실히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2020.9.10.시행)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여부 : 발표된 정답은 ㉠이다. 재무행정론 책들을 살펴보았지만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이체를 사제로 들고 있는 책은 찾지 못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의 규정으로 볼 때 ㉡ 예산의 이용도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답 ㉡

15 현대적 행정이념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성
- ② 가외성
- ③ 신뢰성
- ④ 성찰성

해설

'현대적'에 초점을 두어 '전통적' 이념인 민주성을 답으로 본 것 같다.
하지만 '현대' 행정 운영에서의 이념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찾았다면 그나마 '성찰성'으로 보인다.
아예 문제에서 전통적인 행정이념과 구별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모르겠지만 ①을 답으로 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답 ①

16 윈터(S. Winter)가 제시하는 정책집행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 ② 일선관료의 행태
- ③ 조직 상호간의 집행행태
- ④ 정책결정자의 행태

해설

☞ 윈터(S. Winter)의 정책결정 - 정책집행 연계모형

정책집행 성과를 결정하는 4가지 변수(정책집행을 정책형성과정과 연계하여 제시. 정책형성과정 특성 + 정책집행과정 특성 3가지)를 제시하고 정책실패 요인을 집행과정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주장(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성)

정책집행 성과를 결정하는 4가지 변수		정책실패 요인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인과모형, 갈등, 상징적 행동(상징적 이유로 채택된 정책), 결정자의 관심[주위]	• 합리모형 : 타당한 인과모형이 없어 결과예측이 불충분한 경우 • 갈등·타협모형 : 참여자 간 갈등이 심하고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경우 • 쓰레기통모형 : 상징적 이유로 채택된 정책이나, 결정자의 관심 부족으로 집행과정에서 지연·왜곡 발생
정책집행과정의 특성	조직 내 혹은 조직 상호 간 집행행태	조직 간 목표가 상이하거나 갈등이 높은 경우
	일선집행관료의 행태	일선관료들의 직무환경이 열악한 경우
	정책대상집단의 행태, 사회경제적 조건	대상집단의 행태가 다양하거나 사회 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경우

답 ④

17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대응성 제고
- ② 규모의 경제 실현
- ③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 ④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해설

시·군 통합 대신 광역행정을 생각하고 풀면 됨. ②③④는 광역행정의 장점.

① (×) 자치단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의 요구에 충실한 지방행정이 곤란해진다.

☞ 도농통합(시·군 통합)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② 재정적 비용 절감 : 행정기관과 공무원 수 감소, 중복적 행사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③ 공공서비스 생산의 규모의 경제 실현 : 공공서비스의 생산규모를 증대시켜 서비스의 단위당 생산비용 감소 ④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외부효과의 내부화 ⑤ 도시와 농촌 간 균형적 발전, 지역 간 격차 해소 ⑥ 도농 상호 간 삶의 질 향상 : 도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수요 충족과 녹지공간 확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의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을 위한 배후시장기능 수행
부정적 평가	① 도시지역 위주의 행정 가능성,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 도시지역 출신의 지방의원 수가 많아 도시지역 위주의 행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재정역력이 넉넉지 않아 농촌지역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와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② 도시의 행정수요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 : 개발수요와 생활활동이 다른 두 지역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도시시설 측면에서 도시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아 교통서비스, 상하수도, 각종 편의시설 공급이 용이한 반면, 취락이 산재한 농촌지역은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 공급에 애로가 있음. ③ 행정의 주민 대응성 감소 : 자치단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의 요구에 충실한 지방행정 곤란. ④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하는 현실적으로 곤란 : 인간의 정주권역의 유동성과 지속적인 변화로 실제 거주생활권역을 제도적인 자치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생활권의 연결성'에만 중점을 둔 도농통합은 생활권역을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됨.

답 ①

18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감면 확대
- ② 정부규제 강화
- ③ 소득재분배 강조
- ④ 소수민족 기회 확보

해설

진보주의는 시장의 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누진소득세 같은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주장한다. 조세감면의 확대는 보수주의 정부관의 내용이다.

답 ①

☞ 이념에 따른 정부관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구분	보수주의 정부관	진보주의 정부관	
이념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기독교적 보수주의, 최소한의 정부(소극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사회주의, 혼합자본주의국가, 평등주의, 규제된 자본주의, 개혁주의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관(이기적 인간). 오류 가능성이 없는 인간.	경제인의 인간관 부정. 인간은 욕구, 협동, 오류가능성이 있다고 봄	
시장과 정부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며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를 보임. 최소한의 정부(정부 불신 ⇨ 작은 정부) 기계적 정부관(소극적 정부관)	효율성과 공정성(기회균등), 번영 및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지하고,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의 치유책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봄 적극적인 정부(정부 개입 중시 ⇨ 큰 정부) 유기체적 정부관(적극적 정부관)	
가치 판단	자유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국가(정부)로부터의 자유 강조 ⇨ 보수적 자유주의	자유를 열렬히 옹호-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국가(정부)에 의 자유 ⇨ 진보적 자유주의
	평등	기회의 평등(기회균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형식적 평등(소득·부나 기타 경제적 결과의 평등은 경시)	결과의 평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개입 허용-실질적 평등
	정의	교환적(평균적) 정의(거래의 공정성)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
선호정책	소외집단 지원 정책에 반대(복지정책 대상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혐오) ⇨ 복지정책 축소, 성장(효과성·생산성) 중시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빈곤층, 소수민족, 여성들을 위한 기회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정책을 선호 ⇨ 복지정책, 분배(형평성) 중시	
	조세 감면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경제적 규제 완화, 시장 지향 정책	의료보장·소비자보호, 공해 없는 환경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규제 선호	
실례	개량적(改良的)적 변화(점진적 변화)	개혁적 변화	
	기독교 보수주의지지, 낙태 금지를 위한 정부 권력 사용 찬성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찬성, 총기휴대 찬성 자주국방(마파), 세계질서 구축(미국)	기독교 보수주의의 반대,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 권력 사용에 반대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반대, 총기휴대 금지 평화군축(비둘기파)	
관련 정권	우파정권과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유럽 좌파정권과 제3의 길	

[관련기출1] 진보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011 서울9급

① 소극적 자유 선호 ② 공익목적의 정부 규제 강화 강조
 ③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④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⑤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정책 선호

답 ①

[관련기출2] 진보주의 정부관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2005 대구7급

① 오류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 ②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③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선호 ④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답 ②

19 옴부즈맨(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 ② 행정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③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다.

해설

① (○)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
 ② (×) 외부통제의 한계를 보완. 전통적인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이를 보완(옴부즈맨은 전문지식 보유, 부당한 사항도 통제, 독립성 보유)하여, 용이하고 적절하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통제수단으로 발달하였다.
 ③ (○) 직접적 통제권은 없고 간접적 통제권을 가짐.
 ④ (○) 옴부즈맨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에서 선출되고 조사활동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정부가 임명하거나, 행정부 소속인 국가(프랑스)도 있다.

답 ②

20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
- ② 전입은 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 이동을 의미한다.
- ③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 ④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2급에 해당하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

해설

① (△)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며,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할 경우도 있다.

· 임용의 유형

<p>외부임용 (신규채용)</p> <p>정부조직 외부에서 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p>내부임용</p> <p>정부조직 내 공무원의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이동 배치전환(전직, 전보, 전입, 파견근무), 겸임, 직무대행 ○ 수직적 이동 승진(상향적 임용), 강임(하향적 임용) ○ 기타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직권면직·파면·해임·퇴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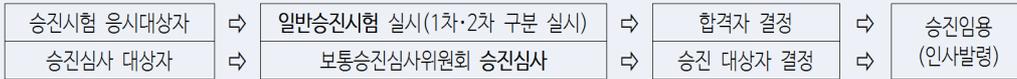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위와 상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이하 각호 생략)

③ (×) 국가공무원법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을 거치되 필요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만으로도 임용 가능함을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5급으로의 승진 :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양자 병행도 가능)



- ① 심사승진 :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자 순으로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범위(결원 수의 일정 배율) 내의 해당자에 대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
- ② 승진시험 :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자 순으로 결원의 2~5배수 해당자에 대한 승진시험(제1, 2차 구분 실시) 합격자를 승진임용.

승진절차

승진계급	승진대상	승진방법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	자격·경력 갖춘 자 : 3급 공무원, 4급(3년 이상) 경력자로서 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 통과자	보통승진심사위의 대상자 선정 ⇒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의 승진심사 ⇒ 임용 제청
4급 ⇒ 3급	같은 직군 내 바로 하급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의 심사
5급 ⇒ 4급		보통승진심사위의 심사
6급 ⇒ 5급	4급 이하로의 승진은 동일 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	① 승진시험 또는 ② 보통승진심사위 심사 *양자 병행 가능
7급 이하 ⇒ 상위 계급		보통승진심사위의 심사(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병과 가능) 6·7·8급으로의 승진은 근속승진제 적용

- ④ (×) 개방형직위의 대상 직위와 비율
- ①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직위(실·국장급)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해야 함.
- ② 소속 장관이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해야 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여부 : 발표된 답안은 ④이지만 ③도 답으로 본다.(①의 경우도 표현은 명확하지 못하다)

답 ④③

21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괄예산제도
- ② 예산의 이용
- ③ 예산의 전용
- ④ 예산의 재배정

해설

④는 재정통제수단.

답 ④

1.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2014 국기9급
① 예비비, 총액계상예산 ② 이월, 계속비 ③ 이용, 전용 ④ 예산의 배정·재배정	
2. 예산집행의 신속성유지방안이 아닌 것은?	2004 국회8급 / 2007 광주·부산소방직 / 2018 해경간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재배정 ③ 총괄배정예산 ④ 예산의 이용·전용 ⑤ 예비비	
3.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가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집행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15 서울9급
① 계속비 ② 예산 배정·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전용 ④ 예산의 이체·이월	
4.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2016 행정사
① 예비비 ② 예산 이용·이체 ③ 예산 전용 ④ 총액계상제도 ⑤ 예산의 정기배정	
5.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집행 장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018·2013 군무원
① 총괄예산제도 ② 추가경정예산 ③ 계속비·예비비 ④ 예산 배정·재배정 ⑤ 긴급배정	
6.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① 예산배정제도 ② 국고채무부담행위 ③ 추가경정예산 ④ 계속비와 예비비 ⑤ 이용과 전용	

22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 옳은 것은?

- ① 주민발안, 주민소환
- 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 ④ 주민소송, 주민총회

해설

- ① (△)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제20조). 주민발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상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를 (간접적) 주민발안제도 보는 견해도 있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발의하는 제도(직접적 주민발안)가 아니므로 주민발안제도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정부측 법률안[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 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입법 실무'에서는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를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 '간접발안'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 ②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
 - ③ (○) 각각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6조에 규정
 - ④ (×) 주민소송은 규정(제17조), 주민총회는 규정되지 않음
- * 정답 여부 : ①은 견해가 갈리고 ③은 확실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③을 답으로 봄.

답 ③

23. **엽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 ② 행정의 공정성 확보
- ③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
- ④ 유능한 인재 등용

해설

- ① (×) 정권 교체에 따른 공직 경질로 인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확보 곤란.
- ② (×) 정치적 임용에 따른 정실주의로 인해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저해.
- ③ (○) 엽관제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에 비해 국민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므로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이 향상될 수 있다. 행정의 대응성·책임성·민주성을 확보했던 엽관제와 달리 실제는 정치성의 과소평가 및 관료제의 경직화·특권화·보수화로 인하여 대응성·책임성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실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엽관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대두되었다. 즉, 오늘날에도 고위직에 대한 정치적 임용 또는 엽관주의적 임용이 이뤄지는 이유는 공무원 사회의 관료주의화 방지와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중요한 정책변동에의 대응, 정당정치의 발전 촉진 등이다.
- ④ (×) 능력과 무관한 임용이 이뤄져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곤란하다.

답 ③

[관련기출]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지방9급

- ①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직주의 수렵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했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답 ②

24. **정책유형별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정책 : 국경일의 제정, 정부기관 개편
- ②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제한
- ③ 추출정책 : 조세, 병역
- ④ 분배정책 :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해설

- ① (×) 국경일 제정은 상징정책

답 ①

[관련기출1] 정책의 유형과 실제 정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2005 국회8급

- ① 상징정책 : 국경일, 애국지사 동상 건립
-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저소득층 조세감면
- ③ 규제정책 : 로기준법·식품위생법
- ④ 추출정책 : 토지수용, 준조세 각출
- ⑤ 분배정책 : 선거구 조정, 공무원연금 정책

답 ⑤

[관련기출2]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Almond와 Powell의 정책유형은?

2010 경기 소방직 / 2011 전남전원특채

-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신뢰성이나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정책
- **국경일 제정**, 축제 개최, 동상 건립, 스포츠행사, 궁궐복원 등과 연관된다.

- ① 상징정책 ② 추출정책 ③ 분배정책 ④ 규제정책

답 ①

[관련기출3] 정책유형 중 상징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6 행정사

- ㉠ 선거구의 통폐합 ㉡ 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개최 ㉢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
- ㉣ 조세 부과 및 징병 ㉤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

답 ①

25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유관 단체에는 공기업이 포함된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 ③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존속 것도 포함된다.
- ④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것은 제외한다.

해설

- ① (○)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② (×)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하 각호 생략)
- ③④ (○)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답 ②